

월요광장

‘문학관’과 광주, 바람 없는 공중의 깃발



송광룡 시인·문학발 발원인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영화, 음악, 공예, 대중문화 등 다른 장르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해 왔지만 문학을 지원하는 법은 없었기에 국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쏠린 국립한국문학관은 그 가시성과 상징성 때문인지 가장 먼저 화두가 된 느낌이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용도에 맞는 구상이 필요하다. 어느 땅에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무슨 물건을 들이며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부지 따로, 설계 따로, 사람 따로, 물건 따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집을 지으려면 사전에 설계와 건축, 부동산, 인테리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오랫동안 상의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국립한국문학관 사업은 오는 7월에 부지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건립하여 이듬해 개관할 계획이다. 문학진흥법에 명시된 규모와 내용으로 보자면 국립한국문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관리하고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전시·홍보·교육 등의 기능을 한다. 국비 450억 원을 들여 1만5000㎡의 터에 지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학 진흥의 핵심거

점 역할을 할 만도 하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집’을 어떻게 운영할지, 내용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15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연 2회 정기회의를 갖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라한다. 연 2회의 만남으로 ‘문학진흥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

한국작가회의,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가 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런 걱정 때문일 터이다. 단체장들은 문학관 부지 선정 과정에는 그 어떠한 지역 안내나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배제되어 한다고 지적했다. 백년 우은 말이다. 24개 지자체 중 어느 곳이 낙점을 받을지는 하느님도 제발 몰랐으면 좋겠다.

기억하기로, 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밟고 나선 곳은 장흥군이다. 장흥군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문화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되었다. ‘맨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을 비롯하여 이창준·송기숙·이승우·위선환·김영남·이대흠 등 현대문학 등단 작가만도 120여 명을 배출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유치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며 옛 교도소 부지를 일찌감치 후보지로 추천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떠한가. 서울시는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내세우며 지난 4월 관내 문인·언론인 등 120명의 인사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인천시는 인천 문인과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위원회’를 만들었다. 대구도 ‘대구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는 막판에 춘천을 단일 후보지로 조율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위원회 위원 20명이 춘천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포시는 ‘시민독서운동의 요람’임을 내세웠고 안양·광명·안산·과천·시흥·의왕 등 경기도 중부권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유훈 광주만이 조용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축적으로 추진하다 수많은 잠을 끝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빛고을문학관’(가칭) 건립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공모 마감 직전 예야 광산구와 동구를 후보지로 추천한 광주시는 “지역 문학인들이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위원회 등을 조직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데 광주시는 그렇다 치고 문인이나 관련 단체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칼럼

무엇이 장애를 장애로 남게 하는가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애 인권은 있는가?

진정 어머니는 여러 모임을 주도하실 정도로 활발하고 외향적인 분이였다. 그런데 3년전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어머니는 남은 생 동안 오른쪽 다리 편마비와 단기기억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병원에서 1년 반만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26년된 아파트에 그대로 살길 원하셨는데,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오르내렸던 1층 현관 계단 6개를 혼자 오르내릴 수 없어 12층 아파트가 사실상 감옥이 되어버렸다. 오랜 재활치료 끝에 이제는 위계를 짓고 조금씩 걸어나가게 되어, 기본 전환이라도 시켜드릴까 하여 주말에 맞 집에 모시고 다닌 적이 있다. 그때마다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휠체어 이동 가능한 턱이 없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 식당을 찾으려니 호텔급 식당이나 갈 수 밖에 없었다. 겨우 섭외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 치면 사람들이 위계를 짓고 걸어가는(혹은 휠체어를 타고 가는) 엄마에게 호기심과 동정심 어린 시선을 던지거나 노골적으로 왜 이런 시선과 질문은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런 시선과 질문에 자존심이 상한 어머니는 이제 되도록 식

당도 가지 않으려 하신다.

장애로 인해 살림을 할 수 없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신청이란 걸 했다니, 고압적인 공무원이 나와 몇가지 정해진 객관식 질문에 체크만 하고 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엄마의 사정이 어떠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이야기하려 했더니 그런 건 정해진 기준에 있지 않다는 답변만이 반복되는데, 나는 엄마가 엄마의 권리를 누리는데 왜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하는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혹시나 등급이 낮게 나와 엄마에게 해가 될까 되도록 웃는 낯을 지어야 했다.

얼마 후 소고기 등급 매기듯 3등급이 나왔으며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거기서도 당황스러웠다. 엄마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물어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라 ‘이미 정해진’ 서비스가 옮겨주고 정해진 서비스가 아닌 것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안전문제상 주말에도 간병인이 꼭꼭 필요인데 ‘이미 정해진’ 서비스에 주말 간병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개인 돈으로 알아서 하라던, 만일 1층과 식당에 경사로가 있었다면, 식당에 갔을 때 주위의 불쾌한 시선이 아

니었다면, 엄마가 자신이 직접 필요한 간병서비스가 무엇인지 말을 하고 그것에 따라 서비스가 정해질 수 있다면, 엄마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서는 장애를 이렇게 정의한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 장애란, 손상(impairments)을 지닌 개인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태도들과 환경적인 상호 영향에서 유발된다.”

장애가 장애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 장애를 장애로 남게 해버리는 차별(효용의 논리, 비용의 논리)과 방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 문제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고, 장애인 중 거의 90%는 후천적으로(사고, 질병 등) 갑자기 장애인이 된다. 즉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이전에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社說

20대 국회 오늘 개원 새로운 국회상 정립을

오늘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20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정치지형이 바뀐 가운데 내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격랑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국회상 정립 여부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 준 3당 체제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각 당 원내 지도부와 만나 원만한 국회 운영을 당부하면서 ‘협치’가 초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 잠재한 현실의 반영이겠지만, 국민민복을 위해 일하는 약속은 당연하면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조짐이 좋지 않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논의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발로 전문이 갑툭튀니 급기야 19대 국회 마감 직전 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회 상임위 상시청문회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형국이다.

여기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후보로 비칠 만한 발언을 함으로써 새 세력 경쟁이 조기에 점화될 조짐이다. 이는 수세에 몰린 여당의 정권 재창출 의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정권 교

체를 버리는 야권과의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이 와중에도 야권이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더불어민중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도 민생·경제 문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분리 대응’ 기조를 밝혔다. 격정스러운 눈으로 새 국회 출발을 지켜보는 국민의 주문은 국회의원 모두가 ‘초심’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지난 19대 국회가 보였던 극단적인 정쟁과 무능에서 환골탈태를 국민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3당 체제의 기폭제가 됐던 광주·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더민주의 새신 대책은 무엇인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다. 명확한 것은 여야와 지역을 불문하고 이번 국회에 부여된 민생과 협치라는 ‘민의’를 좇지 못하면 반드시 대사는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심각한 광주·전남 일선 경찰의 기강해이

일선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성매매로 입건된 경찰이 있는가 하면 입주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등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영암경찰서 소속 A 경사와 B 경사가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광주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

지난달에는 여중엄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충주점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입주와 사적으로 접촉하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건 발생 전 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전 전남청 광역수사대 C 경위는 파면됐으며 술 접대를 받은 사실만

확인된 D 경위는 항응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광주에서는 현지 경찰관이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E 순경은 지난 5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가솔 여중생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 순경을 대기 방명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 비위를 저지르는 것은 시민들의 실망은 물론 경찰의 권위와 공권력의 실추를 가져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 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비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비위 경찰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다소 생소했던 ‘조현병(鵲絃病)’이라는 용어가 ‘강남 문지마 살인사건’ 이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원래는 정신분열병이라 했으나 조현병으로 바뀐 명칭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담긴 몇 안 되는 의학 용어 중 하나라 꼽힌다.

조현병(schizophrenia)이란 명칭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파울 오이겐 블로일러다.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분리’(schizo)와 ‘마음’(phrenia)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새 병명을 사용한 것이다. 깨진 마음 또는 영혼, 즉

국문학자들의 도움이 보태져 2011년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

조현(鵲絃)이란 ‘현악기의 줄을 고르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신경계나 정신의 조율이 잘 안 된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부정적인 뜻이 없는데다 병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한, 의료계가 만든 적절한 병명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조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따 왔을까? 서산대사가 저술한 ‘선가귀감’에 이런 일화(逸話)가 나온다. 부처의 한

조현병(調絃病)

제자가 낚심으로 정신이 혼란해졌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때 부처가 거문고 줄 고르는 법에

비유해 “정진도 너무 조급히 하면 틀려서 뺨기가 쉽고 너무 느리면 게을러지게 되니, 너무 집착하지도 게으르지도 말라”는 깨우침을 주었다. 조현이란 말은 바로 이 일화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최근 조현병 환자를 강제조입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칫 정신질환 혐의로 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범죄율보다 낮다. 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 없는 시각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망 구축이 우선이다. /채희중 사회2부장chae@

기 고

공무원노조 문제와 광주시정은 별개 사안이다



채길성 광주시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 상임의장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문민정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심사조건(공무원노조 유무)을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면서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공무원단체는 초창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도입과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일 반노조법과 다른 노동3권(단결, 교섭, 행동)이 제한된 기형적인 법으로서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충돌로 친 노동자 성향인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가입에 따른 행자부 고발 등으로 내부가 어수선하며, 공무원 신분인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곤혹감으로 난처한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공무원법만을 적용하여 시와 노조를 압박하

고 있다. 법외노조를 인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정부는 광주시에 대한 지원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역점사업은 분명 공무원노조와 별개 사항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까지 시의 역점사업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대형 사업들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은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의 산업도시로서의 임지를 굳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광주의 교통축을 바꾸는 사업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5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역량을

재결집, 광주를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할 대형 이벤트다.

공무원 노사관계는 사측이 정부, 국회도 아닌 국민일 것이다.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은 일부 직원복지를 제외한 위 입사유일 뿐이고, 정부의 각 부처가 1차로 사측이 될 것이며 최종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부담감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을 빌미로 정부의 갑질과 미온적인 태도는 광주시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역점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의 책임을 자유스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형평성과 국정 의 기준이 모호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를 인정하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기보다는 광주 역점사업에 정부의 통 큰 결단과 책임이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